

#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105호 1판 (음력 9월 10일)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2010년 10월 0월 의표일

## KTX 호남선·전라선 이용객 요금 6235억원 더 냈다

"오송역 우회로 늘어난 19km 추가 부담 않겠다 약속 어기고 왕복요금 6200원 더 받아 … 9년 간 눈속임 할인혜택 적용"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가 호남선·전라선 고속열 차(KTX) 오송역 우회로 인해 늘어난 거리만큼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호남·전라선 고속열차 이용객의 대부분인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그동안 우회 요금을 추가 부담해 오면서 또다시 오송역 우회에 따른 운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 승용 의원(여수을)은 7일 한국철도공사(코 레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는 KTX 오송 역 우회로 인해 늘어난 거리만큼의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었다"면서 "이로 인해 호 남선과 전라선 이용객들이 그동안 수 천억 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할 당시 KTX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호남선과 전라선은 19km를 돌아서 운행하게 됐고 늘어난 거리만큼의요금이 포함돼 전체 요금이 책정됐다.

당시 광주와 전남·전북 등 지자체들과 정치권, 호남 지역민들은 철도 운임을 떠 나 호남선 KTX분기역을 최단거리인 '천 안 분기역' 선정을 정부에 꾸준하게 건의 하면서 유치전력을 폈었다. 하지만, 정부 는 결국 호남선 KTX 분기역을 '오송'으로 결정했고, 대신 운행거리가 늘어난 만큼 운임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었다.

주의원은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추병직 장관은 2005년 8월22일 있었던 제 255회 임시회에서 오송역 우회로 거리가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요금을 부담하지 않 겠다고 답변했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코레일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우회 거리인 19㎞에 대한 요금을 차감할 경우 현행 4만6800원 보다 3100원 저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 대학교 www.kwangshin.ac.kr 렴한 4만3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입해 계산해보면 오송역 우회 전라선이 운행된지난 201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호남선 이용객약 7120만명과 전라선 이용객 2936만 명이 왕복 열차 요금 6235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라고 주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돌아가면서 우 회한 거리만큼의 운임인 3100원을 호남민 이 떠안는다'면서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광 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추가 거리만큼의 운임 부담이 없도록 약속한 정 부에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 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고속열차 승차율에 따라 적용되는 영업 할인이 호남선이 타노선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으며, 용산~전주 구간 요금이 고속선 개통 전 3만2900원에서 개통 후 3만4300원으로 상승했지만우회구간 요금을 제외하면 3만1600원으로고속선 개통 후 가격이 더 낮아지는 모순된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 의원 측이 서울에서 광주송 정까지 토요일 하루 18편을 기준으로 요금 을확인해 본결과 오전 5시10분첫 기차와 두 번째 기차, 막차 등 3편에서만 10%할인 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는 5% 마일리지 적립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송역 우회로 인 해 피해를 보고 있는 호남선·전라선 이용 객들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수요가 적은 시간대의 열차를 할인해 판매하는 마케팅 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 의원 측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코레일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일괄적인 할인율 적용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운임에 대한 요금 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iu.co.kr

무안 뻘낙지 분뇨에 오명 뒤집어쓸라 ▶6면

굿모닝 예향-2019 여행 트렌드 ▶18·19면

류현진, 위기의 다저스 구했다 ▶20

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광주 양과동에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이 7일 오후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문을 열었다. 국비 등 총사업비 127억원 가량이 투입돼 양과동 일원 4만 9809㎡ 규모의 부지에 건립된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은 농업전시체험장을 비롯해 곤충전시체험장, 화훼정원, 화훼유리온실과 생태연못 등 조경시설 등이 들어서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태풍 '미탁' 피해 100억 원 넘을 듯

해남군 60억원 넘어 특별재난구역 지정 가능성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전남지역에서 입은 피해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 됐다. 해남지역의 경우 피해규모가 60억원 을 넘기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될 가 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미탁' 으로 해 남·진도·신안 등 11개 시·군의 사유 및 공 공시설 피해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것으 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해남·진도·신안지 역 김 채묘시설이 심하게 훼손되면서 이들 지역 김 양식시설 피해액만 95억500만원 에 이르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전남 275개 어가의 김 양식시설 4만4528책 (1책=가로 2.2m×40m)이 태풍으로 쓸 수 없게 됐다고 집계했다. 전남지역 전체 김 양식시설은 88만책 규모로, 태풍 미탁 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4% 수준이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해남 김 양식시설 피해규모 가 2만6581책(211어가)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1만7747책(61어가), 신안 200책(3어가) 등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공공·사 유시설 침수 피해 등을 고려하면 해남군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구역 선포기준(60억)을 넘는 62억44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진도군은 35억7900만 원, 신안은 1억1200만 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 침수 피해도 컸다. 벼 침수나 쓰러짐(도복) 피해 규모는 영암·해남 등을 중심으로 20개 시·군에서 2759ha에 달했다. 해남에서는 2300ha의 배추밭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농사를 망친 농가는 물론, 본격적인 김 채묘에 들어갈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남도는 연이은 태풍으로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추가 지원과 벼 흑·백수, 수발아 피해 특성을 고려해 피해 조사 기간 연장(7일)을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가의 피해 현황을 빠짐없이 조사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도·시군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복구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 전남지역 피해 복구비는 719억 원(국비 439억원·지방비 280억원)으로 확정됐다.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고지원이 70억 원이 추기돼 지방비 부담이 줄었고 복 구금액 중 농·수산물 재난지원금은 총 513억 원으로 확정돼 농·어가에 긴급 지원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검찰, 3번째 개혁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 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 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 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 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 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 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 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 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 해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제기됐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 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 해 달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랴!

- ■일시: 2019, 10, 20(일) 09:30
- 장소 :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김 광 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센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마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하실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1실/